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모수적 생존모델(Log-Normal Model)을 이용한 분석

강 철 희* · 김 교 성** · 김 진 육***

실직자의 재취업 실태 및 실업기간에 관한 실증연구는 지난 수십년간 실업(고용)보험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체계적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0,141명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중 1997년 6월까지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40,175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의 Life table 분석과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분석을 실시하여, 실직자 및 실업급여 관련 변수들이 실업탈피 기대기간(expected unemployment period)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분석하였다. 생존분석결과 최장 실직기간까지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수급권자들의 비율(누적생존율)이 64.83%나 되었다.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 중 Log-Normal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재취업까지의 기대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학력, 고임금을 받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과 지역 및 업종의 재취업여건 차이를 감안한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실업급여의 제도적 변수가 나타내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 서 론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에게 실업상태의 일정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의 급증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와 실직자의 재취업 및 실업기간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시도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어떠한 특성이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전임강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실직기간 및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최근의 대량실업사태는 실직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나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듯하다. 실직자의 특성에 따른 재취업 실태분석은 향후 실업대책과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온 연구성과와 이론들이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 준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 및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발전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와 향후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될 자료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노동부의 전수자료이다. 본 연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18개월간의 총 60,141명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중 1997년 6월까지의 실업급여 수급권자들(총 40,175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의 Life-Table 분석과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분석을 실시하여, 실직자 및 실업급여와 관련된 변수들의 실업탈피 기대 기간(expected unemployment duration)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에 앞서 실업기간과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Life-Table의 생존표, 누적 생존율 추이 및 재취업 위험도에 대한 분포도, 그리고 Log-normal 모델 분석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이며,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을 지적해야 할 점은, 본 연구기간이 우리 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시기에 해당함으로, 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II. 선행연구

실업기간이나 실업탈피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실업급여의 수준(임금대체율)이나 급여기간(소정급여일수)과 같은 실업급여의 제도적 요인들이 실직자의 실업기간(실업급여의 급부기간)이나 실업탈피(종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물론 그 연구대상이나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탈피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다양한 노동전환 과정을 분석하거나 실업급여 제도외의 법적·제도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탈퇴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서는 실업기간이나 실업탈퇴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실증연구의 경향에 따라 연구자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와 아리조나 주의 CWBH(Continuous Wage and Benefit History)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업급여액의 수준이 실직자의 실업급여 급부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Classen(1977)은 실업급여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실업급여의 급부기간이 길어짐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고, 이러한 효과는 복직(recall)을 기대하고 있는 실직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주당 실업급여액이 증가하면 실업급여 급부기간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증가하고, 실직전의 소득 및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Holen(1977) 역시 Classen과 동일한 중다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비슷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Holen은 1969년부터 1970년까지의 미국 다섯개 도시 실업급여 사무소의 STC(Service To Claimants)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실업급여액이 증가하면 실업기간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연령이 많을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증가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백인이 유색인종에 비해, 실직 당시 소득이 많고 안정성이 양호할수록 그 기간이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Holen은 실업급여액의 수준뿐만 아니라 급여기간(benefit duration)의 증가 역시 실업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실업급여의 수준이나 급여기간과 같은 실업급여의 특성 외에 실업급여의 수혜경험이나 실직자의 주관적 의중임금과 같은 실직자의 주관적 요소가 실업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분석한 연구결과도 있다. Corak(1993)은 캐나다 행정당국의 1971년부터 1990년까지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술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실직자들이 그렇지 않은 실직자에 비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Ehrenberg와 Oaxaca(1976)는 미국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자료에서 45-49세 남성, 14-24세 남성, 14-24세 여성, 그리고 30-44세 여성의 4개 하위 Cohort 표본을 추출하여, 실업급여의 수준과 더불어 의중임금이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집단은 45-49세 남성집단, 그 다음이 30-44세 여성 집단이었으며, 젊은 남성, 여성 집단의 경우 급여 수준이 실업기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영국의 실업자 1096명을 할당표본추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한 Jones(1988)의 연구 역시 의중임금의 영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는데, 실업탈퇴확

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때, 실업급여액의 수준과 함께 의중임금 수준이 실업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밝혔으며, 실직자의 의중임금이 10% 증가하면 실업탈피확률이 55-70% 낮아져 실직자들의 실업기간을 증가시킨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요인 외에 연령이 높고 인적자본의 수준(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실업기간이 증가하고,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실업기간이 짧은 것을 보고했다.

한편, 1979년에서 1986년 사이의 CPS(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와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준의 변화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의 실직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Levine(1993)은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직장탐색기간이 길어지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행위변화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가져오는 유통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그는 유색인종(+), 남성(+), 미혼(+) 등의 변수가 유의미하였으며,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아동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실업기간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2. 실업탈피 및 고용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으로 실업탈피 또는 실업종료에 관한 연구들은 실업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실직자의 실업탈피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부적기간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과 실업급여의 소진 직전에 실업탈피확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스파이크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Poterba 와 Summers(1995)는 실업기간이 길고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실업탈피확률이 낮아짐을 보였고, Katz와 Meyer(1990), Meyer(1990), Belzil(1995)의 연구 역시 실업급여의 소진 직전 실업탈피율이 높았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 급부기간 동안 실직자의 도덕적 위배가 나타난다는 증거로 흔히 제시되고 있다.

Meyer(1990)는 1978년에서 1983년 사이의 CWBH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 높은 교육수준, 높은 임금, 낮은 실업급여수준 등이 실업탈피확률을 높이고, 부양가족이 많고 실업률이 악화될수록 실업탈피율이 저하되었다고 분석하였다. 1980-1981년 사이의 PSID 자료를 분석한 Katz와 Meyer(1990)의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수준뿐만 아니라 소정급여일수가 증가될수록 부적기간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이 나타나 실업탈피율이 저하됨을 발견하였다. 이 두 연구는 모두 급여소진 직전의 시점에서 실업탈피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스파이크 현상을 보고하면서, 이것이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Belzil(1995) 역시 1972-1984년 사이 캐나다 정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업급여 소진시점에서 실업탈피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남을 보고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르게 해석하였다. 즉,

실업급여의 소진시점에 다가갈수록 실직자들이 곧 그만둘 직장제외까지 수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또한 1980년 8월부터 10월사이 미국 전역의 29,620 가구를 조사한 EOPP(Employment Opportunity Pilot Project) 자료를 위험도(hazard) 모델로 분석한 Blau(1992) 역시 67-70%의 실직구직자는 의중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을 받아들인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실업급여의 영향이 불분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시간의존성 효과는 각 국가의 제도적 요소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Korpi(1995), Carling et. al.(1996) 등의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으로의 전환확률이 줄어드는 '부적기간의존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전통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고용전망이 불투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재취업 확률감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부적시간의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Korpi는 1981년부터 1985년 까지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16-24세 사이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실업상태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영구고용, 일시고용)로의 실업탈피 및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성별, 교육수준, 근속년수, 노동시장여건(실직자 대비 구직자수), 국적, 이전의 실업 경험 등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의 진입확률은 실업경험, 노동시장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1991년 2월, 5월, 8월 스웨덴 정부당국에 실업을 통록한 실직자 중 약 12,000여명의 표본을 중심으로 연구한 Carling 등 (1996)의 분석결과는 급여의 소진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프로그램으로의 진입확률과 취업확률은 높아졌지만, 실업급여가 고용전환확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작았으며, 오히려 실업급여가 실직자를 노동시장에 남게하는 유인역할을 한다고 분석함으로써 실업급여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복직(recall) 또는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전에 의한 실업종료 확률 결정요인을 분석한 Idson과 Valletta(1996)의 연구는 1982-1983년 PSID 데이터에서 가구주가 22세에서 65세 사이인 2,844가구를 표본으로 결혼상태, 성별, 노조원 여부, 근속년수, 실업급여 수급, 교육수준이 복직으로의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근속년수, 교육수준, 실업급여 수급, 노조원 여부, 지역 및 산업의 고용증가율 등이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전에 의한 실업종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한편, McCall(1997)은 1986년 캐나다의 서베이 조사인 CDWS(Canada's 1986 Survey of Displaced Workers Supplements) 데이터를 활용하여 풀타임 직업을 잃은 후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완전고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밝히고 성별, 실업급여 수급, 근속년수, 결혼상태, 연령, 교육수준, 이직사유, 5세 미만의 아동 유무 등이 다양한 고용전환을 설명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실업급여 소진직전에 재취업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9주까지 모든 형태의 취업확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그 강도는 점차 낮아졌으며, 특히 30주 후부터는 그 효과가 현저히 약화되어 실업급여의 효과가 시간요소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영향을 준다는 time-constant 가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data)는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총 60,141명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전수를 포함한 자료이며, 이 시기까지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여부가 추적되어 있다¹⁾. 본 자료의 기간은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총 18개월이지만, 1997년 하반기 중에 실직한 수급권자 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요구되는 실업기간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관찰기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들에 대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전체 자료로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수는 40,175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실업급여 수급권자들은 1998년 1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고용보험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에서 소정급여일수, 적용범위 등의 실업급여 내용은 법령개정 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히 이해되어져야 한다.

<표-1> 실업기간 및 실업탈피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연구 대상	연 구 내 용	분석기법
Blau (1992)	미국 EOPP 자료	고용된 근로자와 실직자의 직업제의 및 직업 탐색활동	Hazard Model
Belzil (1995)	1972-1984 캐나다 정부의 실직자 시계열 자료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및 재고용기간에 미치는 영향	Event History Analysis
Carling 외 (1996)	1991년 스웨덴 정부에 등록한 실직자 표본	실업탈피의 유형을 세분화. 연령계층별로 분류 하여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semiparametric competing risk
Classen (1977)	미국 CWBH 자료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중다회귀분석
Corak (1993)	1971-1990 캐나다 정부의 실직자 시계열 자료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수급경험 유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차이	기술통계분석 중다회귀분석
Ehrenberg & Oaxaca (1976)	미국 NLS 자료중 4개의 하위 cohort 표본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연령계층별 4개 하위 모델로 분류하여 분석	중다회귀분석 (NLS Model)

1)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정부의 전산망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필요가 없더라도 실직자가 언제, 어느 기업에 재취업하였는지 파악된다.

<표 1> 계속

연구자	연구 대상	연 구 내 용	분석기법
Holen (1977)	1969-1970 미국 다섯개 도시의 STC 자료	실업급여의 수준, 급여기간, 고용서비스 등이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Idson & Valletta (1996)	1982-1983 PSID 자료중 22-65세 실직가구주 표본	신규 직장 및 이전직장으로의 복직 등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ompeting risk analysis
Jones (1988)	1982년 영국의 실직자에 대한 서베이 자료	실직자의 의중임금수준이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다회귀분석
Kals & Meyer (1990)	1980-1981 PSID 자료중 실직자 표본	실업급여의 수준 및 급여기간이 실직자의 실업기간 및 전체 실업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Kaplan-Meier survive analysis
Korpi (1995)	1981-1985 스웨덴 청년계 총 시계열 서베이자료	실업상태에서 고용 및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Weibull Model
Levine (1993)	1979-1986 미국 CPS 및 NLSY 자료	실업급여의 수준이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McCall (1997)	1986년 캐나다의 CDWS 자료	해고된 이후 실직자들의 고용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트타임과 풀타임 구분.	discrete-time duration 등
Meyer (1990)	1978-1983 미국 12개주 남성 CWBH 자료	실업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실업급여가 실업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semiparametric hazard

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expected unemployment duration)이다. 실업기간의 측정은 실직자의 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 소요된 기간을 일(day) 단위로 계산하였고, 1997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 사업장 요인, 실직사유, 실업급여의 제도적 요인 등 네 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권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들로서는 성별, 연령, 임금수준, 교육수준, 근속년수, 직종이 포함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에게 1의 값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함으로써 dummy 변수로 전환시켰고, 연령, 임금수준, 근속년수, 교육수준은 연속변인으로 분석모델에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교육은 교육년수로 측정되었으며, 근속년수는 이직당시 직장의 취업일부터 실직일까지의 기간을 연(year)단위로 계산하였다. 임금수준은 원자료(raw data)에 월급여액에 대한 누락이 많아 실업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을 만원단위로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제도가 구분하고 있는 9가지 분류를 관리·전문직; 기술·사무직; 생산직; 그리

고 단순노무직의 4가지로 재구성하였다²⁾. 둘째,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이직당시 사업장 요인으로는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포함되었다. 업종은 원자료상의 17개 대산업분류를 1차산업; 제조업; 건설·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그리고 서비스업 및 기타의 6가지 업종으로 재분류하였다. 지역의 경우 원자료상에서 전국의 6개 지방노동청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지역변수는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의 여섯 지역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규모는 이직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백명단위로 환산하여 분석모델에 포함한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직(이직)사유는 고용보험제도상에서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출산·질병 등의 피치못할 개인사유; 정리해고; 기업의 폐업·도산; 사업주 권유 퇴직; 정년퇴직; 기타의 6개 범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다. 넷째, 실업급여의 제도적 요인으로는 실업인정일수, 실업급여 소진여부, 그리고 조기재취직수당액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실업인정일수란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실업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일(day)수를 의미하며, 실제 분석에서는 이것을 주(week) 단위로 재계산하여 이용하였다. 실업급여의 소진여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선인 소정급여일수³⁾를 소진하였는지 여부로 측정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소진했으면 1, 소진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을 부여함으로써 dummy 변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기재취직수당액은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⁴⁾,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초기에 재취업한 경우 지급 받게 되는 이 장려금을 만원단위로 계산하여 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변수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들을 파악할 것이다. 기술적인 분석은 실직 상태에 있는 미취업자와 실직상태를 탈피한 재취업자로 구분하여 기술함으

-
- 2) 직종의 경우에는 누락사례가 전체 사례수의 절반을 넘고 있어 분석모델에 포함될 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직종변수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제분석에서는 직종을 포함한 분석결과와 직종을 제외한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도록 한다.
 - 3) 본 연구는 1998년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기 전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자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5세 미만이 30일, 25-29세는 60일, 30-49세는 9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이다. 이 기준은 1998년 1월 동법의 개정으로 30세 미만 연령층이 60일로 통합·조정되었다.
 - 4)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조기재취직수당액은 남은 실업급여액의 1/3에 해당하지만, 1998년 고용보험법령의 개정으로 그 수준이 남은 실업급여액의 1/2로 인상되었다.

로서 일반적인 차이를 파악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생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업 상태로부터의 탈퇴율과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생존분석은 연구의 관찰 기준시점 전까지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건(event)이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들(censored cases)의 처리를 보다 일관되게 하여, 관심이 있는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측정(estimate)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석방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존 분석 방법중에서 Life-Table 생존표 분석 방법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첫 번째 분석방법은 실업상태로부터의 탈퇴율 및 생존율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Life-Table 생존표 분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구성 범주들이 시간(실업기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 탈퇴율 및 생존율의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구성범주들이 가지는 탈퇴율과 생존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 있다. Life-Table 분석은 사건(event)이 발생한 시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censored 된 사례들이 각 구간의 중간시점에서 censored 된 것으로 처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event) 발생과 censoring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Kaplan-Meier 분석 방법보다 다소 정보의 손실을 가질 수도 있으나, 본 연구처럼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에는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Life-Table 분석방법은 수급권자들의 실직상태에 남아있는 비율의 추이와 각 시점에서의 실업탈퇴율 혹은 재취업 위험도의 역동적 추이(hazard ratio)를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장점을 가진다. 두 번째 분석방법은 생존분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에 기초하는 모수적 생존 분석 모델인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들이 실직 등과 같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현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업탈퇴 등과 같은 사건(event)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실업기간: 종속변수)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모수적 생존분석 모델들 가운데 네 가지 주요모델인 Log-normal 모델, Weibull 모델, Exponential 모델, 그리고 Generalized Gamma 모델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자료에 가장 잘 결합(fit)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각 모델의 log-likelihood 값을 구한 후, likelihood-ratio Chi-square 값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재취업의 가능성(hazard)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log-normal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Log-normal 모델이 본 연구의 자료에 가장 잘 결합(fit)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사건(event) 발생까지의 기간에 각 독립 변수가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파악은 Log-normal 모델의 결과에 따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적 분석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의 기간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총수는 40,175명이었다. 그 가운데, 1997년 12월까지 재취업한 사람은 전체의 31.3%인 12,108명에 불과하였고, 69.7%인 28,008명은 재취업하지 못했다.

<표-2>과 <표-3>는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연속변수와 범주변수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2>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우선 총 수급권자의 평균 연령은 46.03세이며, 재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44.00세로 미취업자의 46.91세보다 낮다. 또한 총 수급권자의 실직전 근속년수는 평균 9.78년이며, 그 가운데 재취업자의 평균치(7.48)는 미취업자의 평균치(10.7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직 당시의 소득을 의미하는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경우,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일액은 4.72만 원으로 이 역시 미취업자의 5.16만원에 비해 낮은 금액이다. 한편, 실직자들의 실직전 사업장 규모를 보여주는 상시근로자수 변수는 중간값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총 수급권자의 50% 이하가 대체로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사업장 규모 또한

<표-2>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일반적 특성: 연속변수

변수	구분	총 수급권자 (n=40,175)	미취업자 (n=28,008)	재취업자 (n=12,108)
연령 (세)	Mean	46.03	46.91	44.00
	SD	10.82	10.82	10.54
	Median	47.00	48.00	44.00
근속년수 (년)	Mean	9.78	10.77	7.48
	SD	8.79	9.20	7.28
	Median	6.41	7.87	4.63
급여기초	Mean	5.03	5.16	4.72
임금일액 (만원)	SD	1.81	1.84	1.72
	Median	5.19	5.59	4.62
상시근로자수 (백명)	Mean	12.95	15.28	7.58
	SD	34.67	37.47	26.32
	Median	1.93	2.20	1.42
급여인정일수 (주)	Mean	9.12	10.32	6.34
	SD	6.03	5.98	5.17
	Median	11.4	12.86	5.29
실업기간 (일)	Mean	273.44	333.66	134.28
	SD	135.87	105.25	88.32
	Median	270.00	333.00	112.00
조기재취직수당액 (만원)	Mean	6.25	-	20.72
	SD	19.87	-	31.75
	Median	0.00	-	0.00

재취업한 사람들의 것이 미취업한 사람들의 것보다 작은 규모이다.

실업급여의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실업급여의 총수 급권자는 평균 9.12주의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재취업한 사람들은 평균 6.34주의 실업 급여를 받았다. 한편, 총수급권자와 미취업자의 실업기간에 대한 수치는 1997년 12월을 censoring 시점으로 잡아 계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정확한(bias)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가운데 재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실업기간은 평균 134.28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한 사람 가운데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은 사람은 전체 재취업자의 36.6%인 4,438명이었으며, 평균 액수는 20.72만원이었다.

<표-3>은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범주변수만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총 수급 권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의 75.2%인 30,193명이 남성이며, 여성은 9,982명으로 전체의 24.8%에 불과하다. 성별 재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은 31.8%, 여성은 25.5%가 재취업하여, 남성의 실업탈피율이 여성의 그것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 학력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43.9%), 그 다음이 중졸(22.2%), 초등졸(13.7%), 그리고 대졸(13.6%) 순이다. 그러나 학력별 실업탈피율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학력자의 재취업비율(37.0%)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26.6%)와 초등학교 학력자(24.4%)의 재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력계층이 양극화 된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총 수급권자의 지역별 분포는 광주·전라와 대전·충청지역이 각각 10.2%와 10.0%, 대구·경북이 17.0%, 그리고 서울·강원(19.8%), 부산·경남(20.4%), 인천·경기지역(22.3%)이 각각 약 20.0%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져 있다. 그 가운데 재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의 재취업율이 35.4%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경남(31.1%), 인천·경기(31.6%), 대전·충청(30.5%) 지역이 평균 수치(30.2%)보다 높았으며, 서울·강원지역의 수급권자들이 24.4%로 가장 낮은 재취업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사업장에서의 직종분포는 누락 사례가 전체의 44.4%(17,443 사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분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직이 전체의 21.3%, 기술사무직이 15.2%, 단순노무직이 12.3%인 반면, 관리전문직이 7.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또한 총 수급권자의 업종에 따른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61.0%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분야 수급권자들의 재취업율은 33.1%로 평균 수치(30.2%)보다 높다. 특이할 만한 점은 건설·전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재취업율이 37.3%로 가장 높고,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의 재취업율은 8.7%로 다른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직사유는 사업주권유 퇴직이 12,370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폐업·도산이 11,161명에 27.8%, 정리해고가 4,573명에 11.4%로서 기업주의 경영사정에 의한 실직이 전체의 70.0%를 차지한다. 이

밖에 정년퇴직은 5,691명으로 14.2%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질병이나 출산과 같은 개인적 사유는 전체의 2.5%에 불과하였다. 한편,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한 실직자들의 재취업율은 40.1%로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정년퇴직자들의 경우 재취업율이 불과 19.9%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계층의 재취업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일에서 210일까지로 다양할 수 있지만, 연구시점 수급권자들의 피보험기간은 모두 2년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별 구분은 연령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연구의 표본에서 소정급여일수가 90일(30세-50세)인 수급권자들이 50.7%로 가장 많고, 120일(50세 이상)인 수급권자들은 40.1%, 60일(25세-30세)인 수급권자들은 6.3%, 그리고 30일(25세 미만)인 수급권자들은 2.9%로 1,153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소정급여일수 분포에 따른 재취업율은 120일 이상(50세 이상: 24.1%)을 제외하곤 모두 평균(30.2%)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 수급권자를 가운데, 실업급여가 소진되지 않은 사람(58.0%)이 소진된 사람(42.0%)보다 많았고, 실업급여가 소진된 사람의 재취업율(43.0%)이 소진되지 않은 사람들의 재취업율(12.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재취업 생존도와 위험도 분석 (Life-Table Survival and Hazard Curve)

본 장에서는 실업급여 총 수급권자들의 실업상태 지속 추이에 대한 생존도와 재취업 위험도를 Life-Table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Life-Table 분석은 우선 총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에 수급권자를 성, 학력, 지역, 직종, 업종, 실직사유, 실업급여 소정일수, 그리고 실업급여 소진여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범주별 생존율 및 위험도 추이의 차이점에 대한 검증은 Wilcoxon test를 통해 비교하였고, 그 결과 분석에 이용된 모든 변수들의 범주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총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Life-Table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변수별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에 대한 분석은 성, 업종, 실업급여 소정일수, 실업급여 소진여부 변수만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제시한다.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최장 실직기간은 520일이고, 최장 실직기간까지 실직상태로 남아 있는 수급권자들의 비율은 전체의 64.83%이다. 한편, 같은 기간까지 재취업한 수급권자들의 비율은 35.17%로서, 전체 수급권자들 가운데 약 1/3만이 재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취업의 가능성(위험도)을 보면, 실직이후 40일에서 80일까지의 기간(위험도 0.001945)에 가장 높으며, 80일에서 120일까지의 기간(위험도 0.001862), 120일에서 160일까지의 기간(위험도 0.001535)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취업 가능성은 40일 이전까지의 기간

에는 낮은 수준이었다가, 40일에서 80일까지의 기간에 최고점을 보인 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3>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일반적 특성: 범주변수

변수	총수급권자 (n=40,175)		미취업자 (n=28,047)		재취업자 (n=12,128)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재취업율
성별							
남자	30,193	75.2	20,606	73.5	9,587	79.0	(31.8)
여자	9,982	24.8	7,441	26.5	2,541	21.0	(25.5)
학력							
초등졸이하	5,518	13.7	4,169	14.9	1,349	11.1	(24.4)
중졸	8,898	22.2	6,117	21.8	2,781	22.9	(31.3)
고졸	17,634	43.9	12,107	43.2	5,527	45.6	(31.3)
전문대졸	2,280	5.7	1,437	5.1	843	7.0	(37.0)
대학	5,461	13.6	3,940	14.1	1,521	12.6	(27.9)
대학원이상	365	0.9	268	1.0	97	0.8	(26.6)
지역							
서울, 강원	7,968	19.8	6,025	21.5	1,943	16.0	(24.4)
부산, 경남	8,184	20.4	5,635	20.1	2,548	21.0	(31.1)
인천, 경기	8,968	22.3	6,137	21.9	2,831	23.3	(31.6)
광주, 전라	4,113	10.2	2,980	10.6	1,133	9.3	(27.5)
대전, 충청	4,021	10.0	2,795	10.0	1,226	10.1	(30.5)
대구, 경북	6,921	17.2	4,474	16.0	2,447	20.2	(35.4)
직종							
기술사무직	6,110	15.2	3,496	27.4	2,614	26.2	(42.8)
생산직	8,565	21.3	4,536	35.6	4,029	40.4	(47.0)
단순노무직	4,943	12.3	2,698	21.2	2,245	22.5	(45.4)
관리전문직	3,114	7.8	2,019	15.8	1,095	11.0	(35.2)
업종							
1차산업	893	2.2	693	2.5	200	1.6	(22.4)
제조업	24,522	61.0	16,395	58.5	8,127	67.0	(33.1)
운수, 창고	2,262	5.6	1,715	6.1	547	4.5	(24.2)
금융보험	3,126	7.8	2,847	10.2	279	2.3	(8.9)
서비스	6,542	16.3	4,623	16.5	1,919	15.8	(29.3)
건설, 전기	2,830	7.0	1,774	6.3	1,056	8.7	(37.3)
실직사유							
개인사유	1,016	2.5	762	2.7	254	2.1	(25.0)
정리해고	4,573	11.4	2,950	10.5	1,623	13.4	(35.5)
사업주권유	12,370	30.8	9,180	32.5	3,262	26.9	(26.4)
정년퇴직	5,691	14.2	4,557	16.2	1,134	9.4	(19.9)
기타	5,364	13.4	3,979	14.2	1,385	11.4	(25.8)
폐업, 도산	11,161	27.8	6,691	23.9	4,470	36.9	(40.1)

<표-3> 계속

변수	총수급권자 (n=40,175)		미취업자 (n=28,047)		재취업자 (n=12,128)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재취업율
소정급여일수							(30.2)
30일	1153	2.9	740	2.6	413	3.4	(35.8)
60일	2552	6.4	1,577	5.6	975	8.0	(38.2)
90일	20,374	50.7	13,511	48.2	6,863	56.6	(33.7)
120일	16,096	40.1	12,219	43.6	3,877	32.0	(24.1)
급여소진여부							(30.2)
소진	16,873	42.0	14,774	52.7	2,099	17.3	(43.0)
미소진	23,300	58.0	13,272	47.3	10,028	82.7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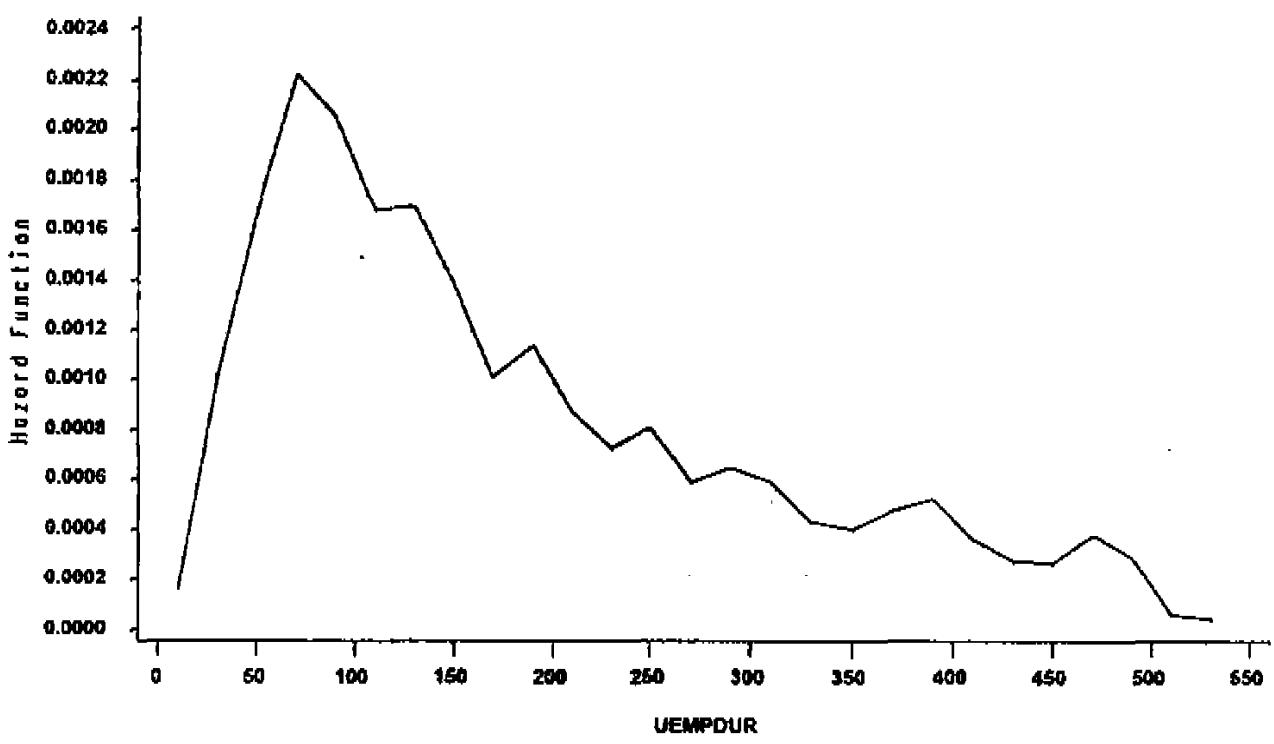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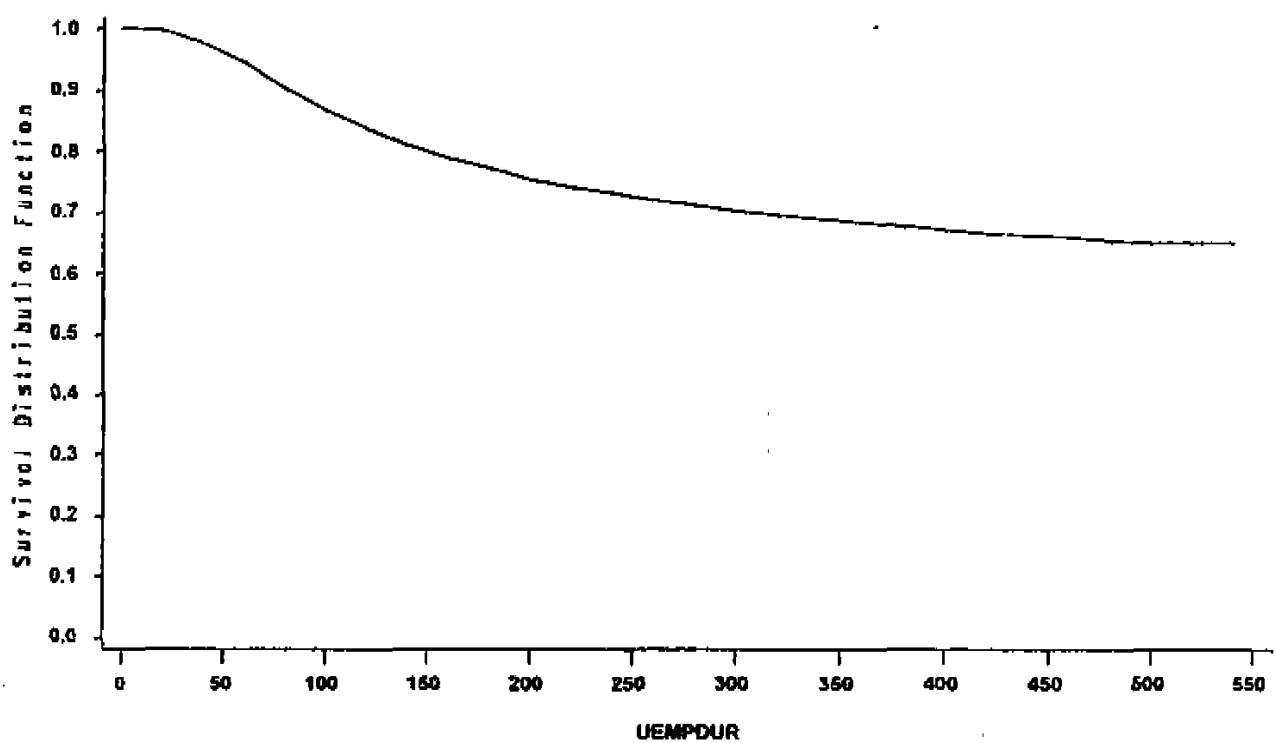
* 이전 직종의 경우, 표본의 수가 22,732개임.

<표-4> 누적 생존율 및 재취업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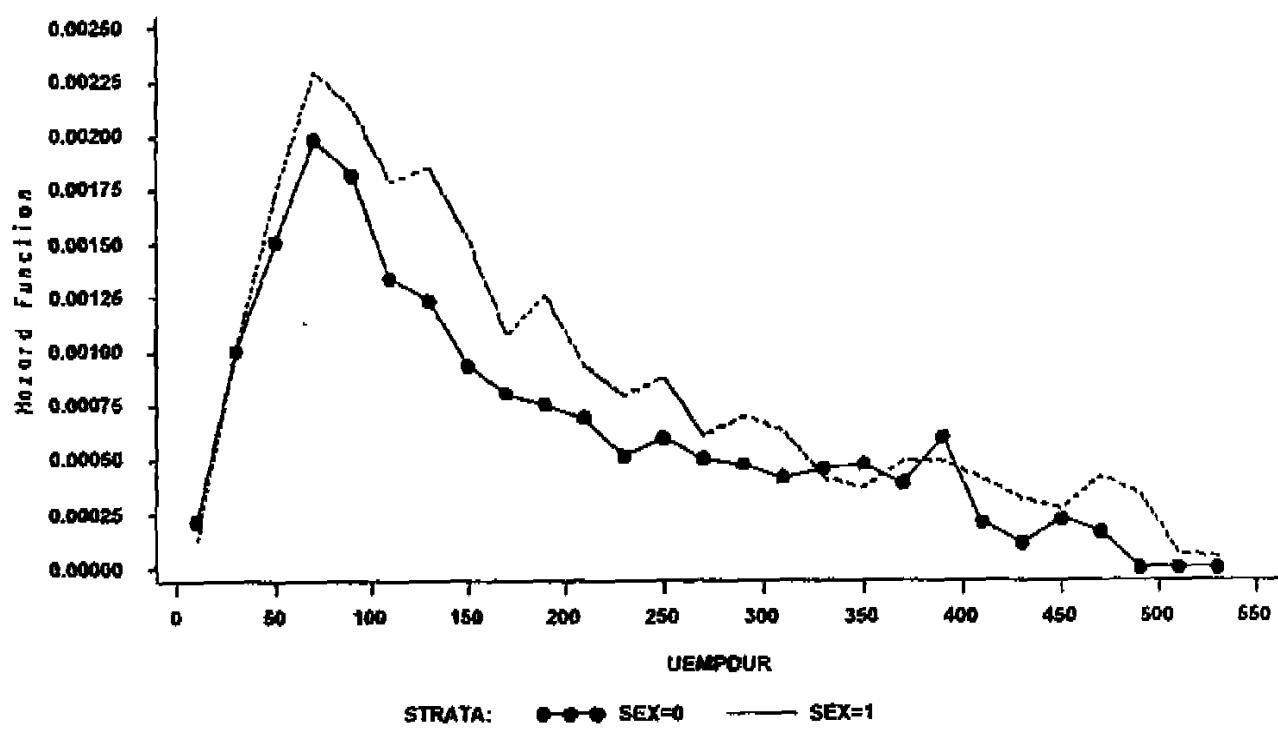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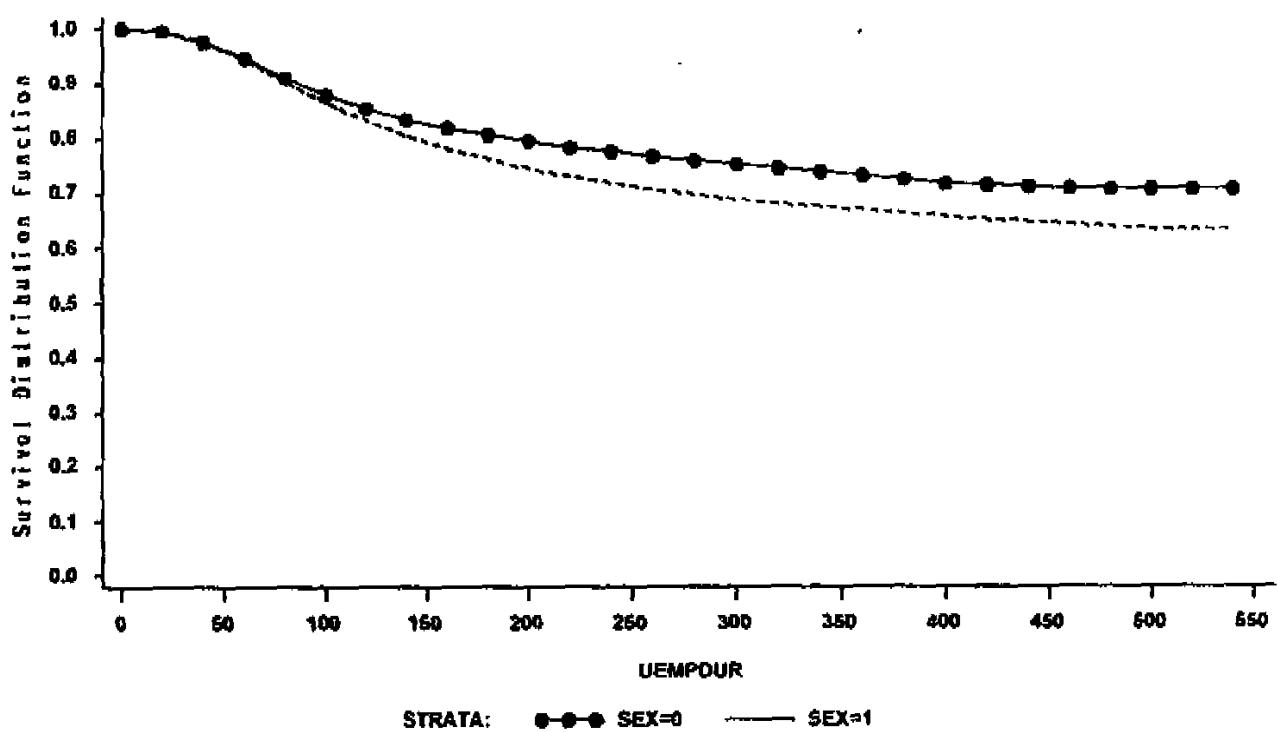
기간	재취업자	censored	표본수	누적 생존율	재취업위험도
0	40	929	0	40175.0	0.000585
40	80	2939	0	39246.0	0.001945
80	120	2607	0	39307.0	0.001862
120	160	2007	0	33700.0	0.001535
160	200	1287	3294	30046.0	0.001094
200	240	797	3080	25572.0	0.000792
240	280	580	4371	21049.5	0.000698
280	320	415	2777	16895.5	0.000622
320	360	224	2219	13982.5	0.000404
360	400	188	4974	10162.0	0.000467
400	440	86	1901	6536.5	0.000331
440	480	51	2430	4285.0	0.000299
480	520	17	1750	2144.0	0.000199
520	--	1	1251	626.5	0.6483

<그림-1>의 실업급여 총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는 Life Table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누적생존율(실직상태 잔여율)은 매우 높으며, 재취업 위험도는 실직의 초기부터 일정 시점(40일에서 160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성별에 따른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는 아래 <그림-2>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관찰시점까지의 남성과 여성의 재취업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누적 생존율은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남성의 누적 생존율은 여성의 누적 생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의 재취업율이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남녀모두 실직초기에는 재취업의 가능성(위험도)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나, 80일을 정점으로 재취업의 가능성은 오히려 완만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남녀실직자 모두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은 또한 남성의 재취업의 위험도가 여성의 그것보다, 실업초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은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누적 생존율의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가 업종에 따라 상당히 다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건설·전기 업종의 수급권자와 금융·보험업 수급권자의 누적 생존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재취업 가능성의 경우, 금융·보험업 수급권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0.05% 이하로 낮게 지속되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림-4>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소정급여일수별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인데, 이는 연령별로 구분한 누적 생존율의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와 동일하다. 누적 생존율의 결과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수급권자들(50대 이상)의 누적 생존율이 다른 수급권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급권자의 급여소진여부에 따른 누적 생존율 추이의 경우 급여가 소진되지 않은 수급권자들의 누적 생존율이 급여가 소진된 수급권자에 비해 매우 낮고, 재취업 위험도의 경우 급여가 소진되지 않은 수급권자들의 재취업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가 소진된 사람들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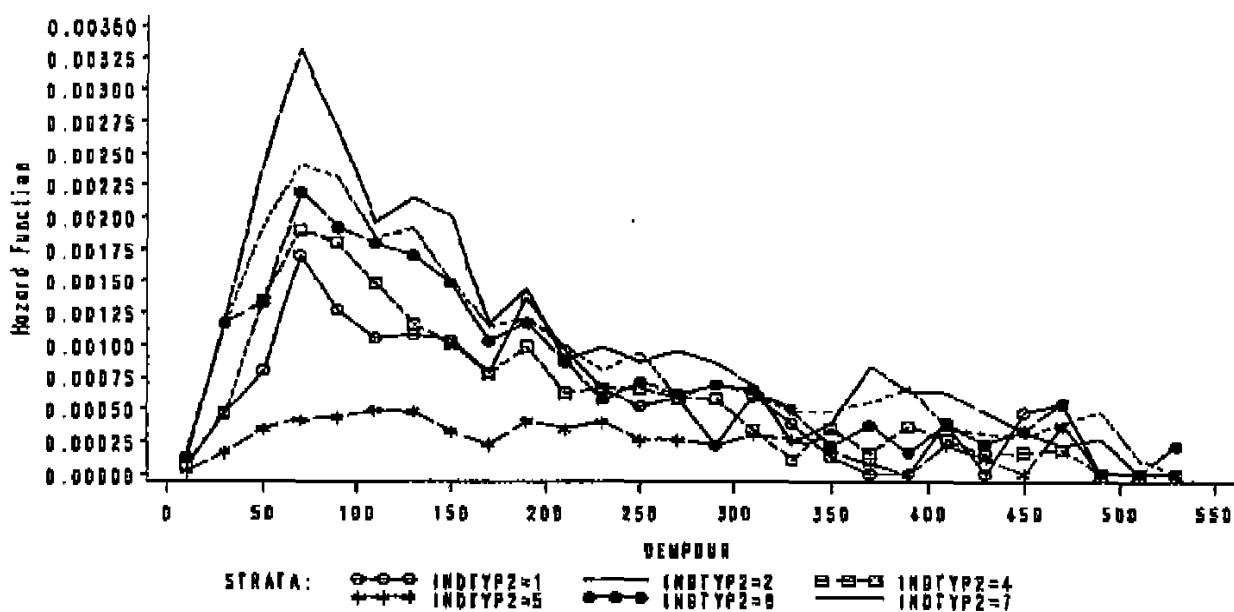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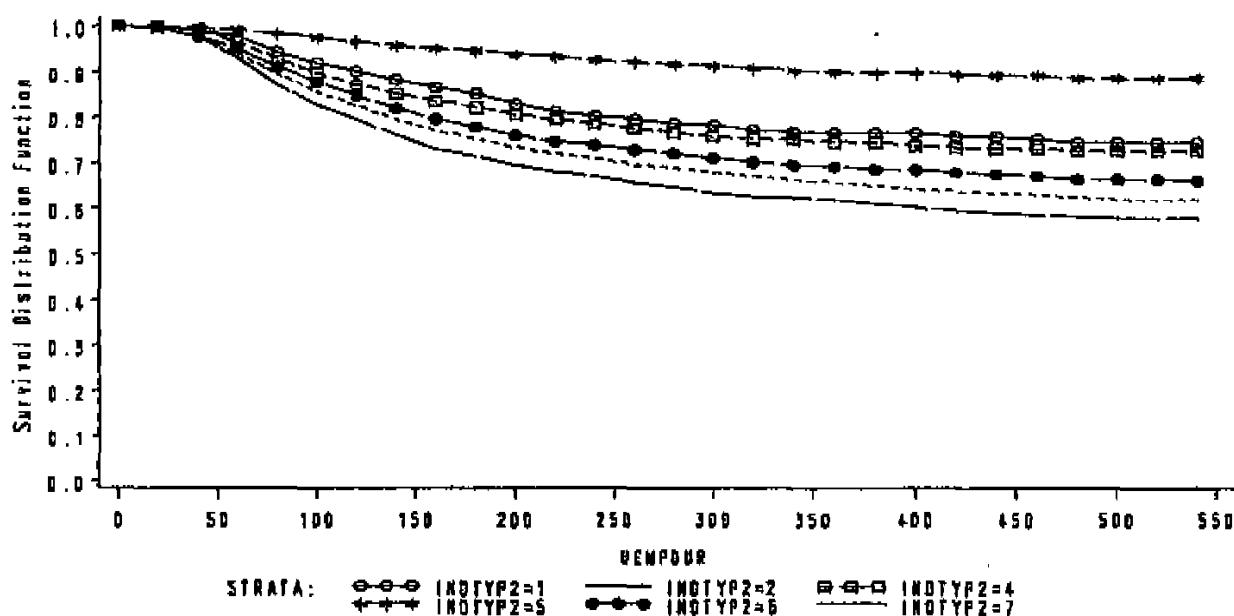
<그림-1> 실업급여 총 수급권자의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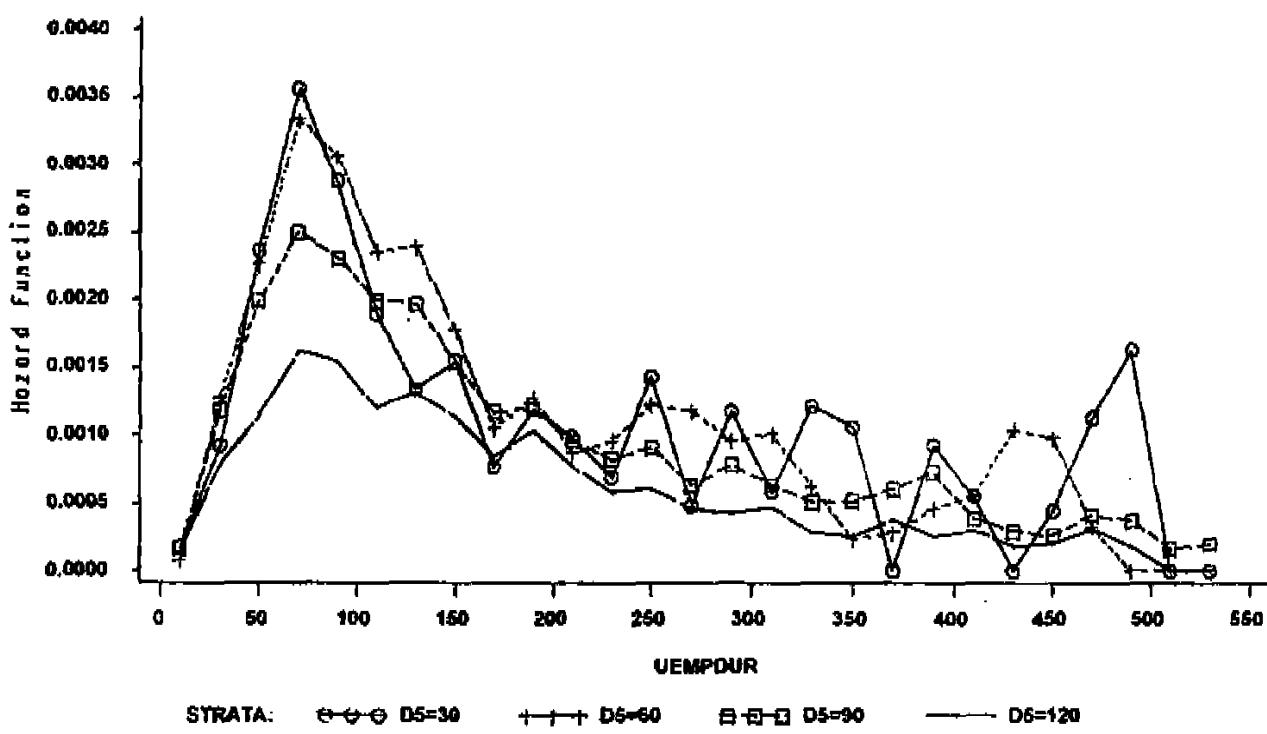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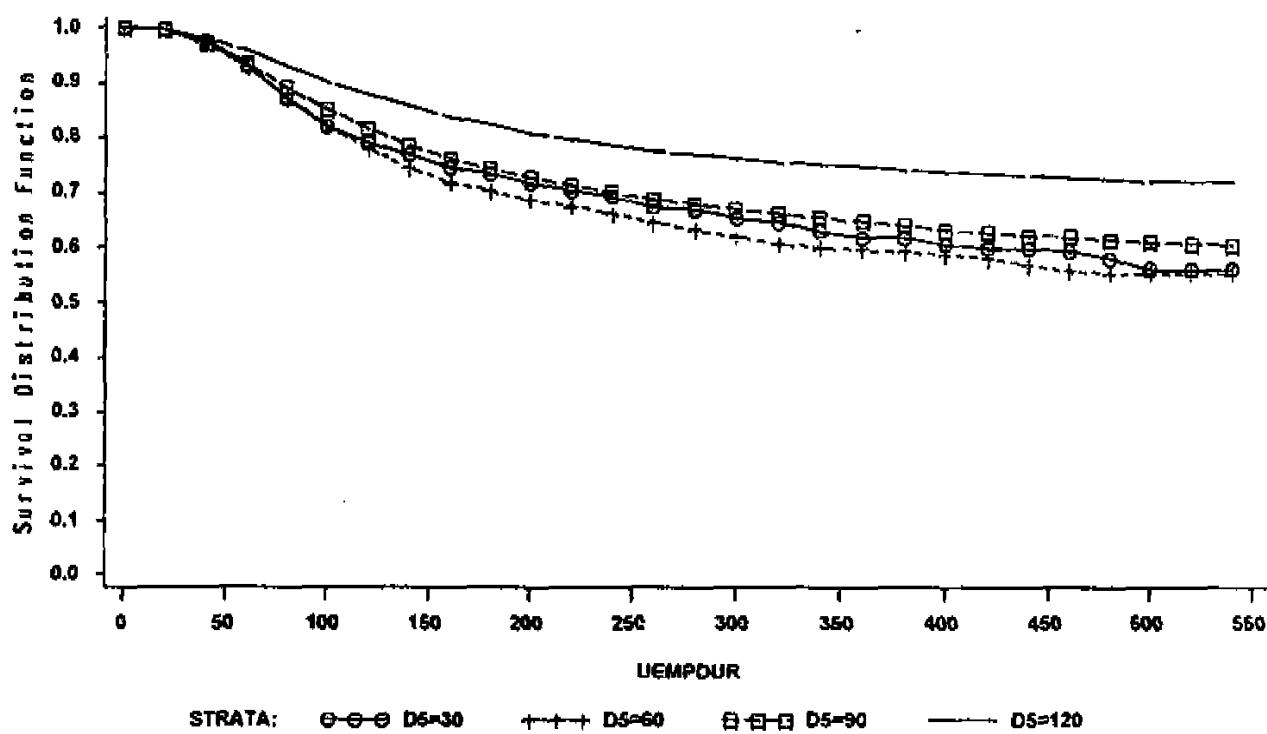
<그림-2>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성별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

Sex=0: 여성, Sex=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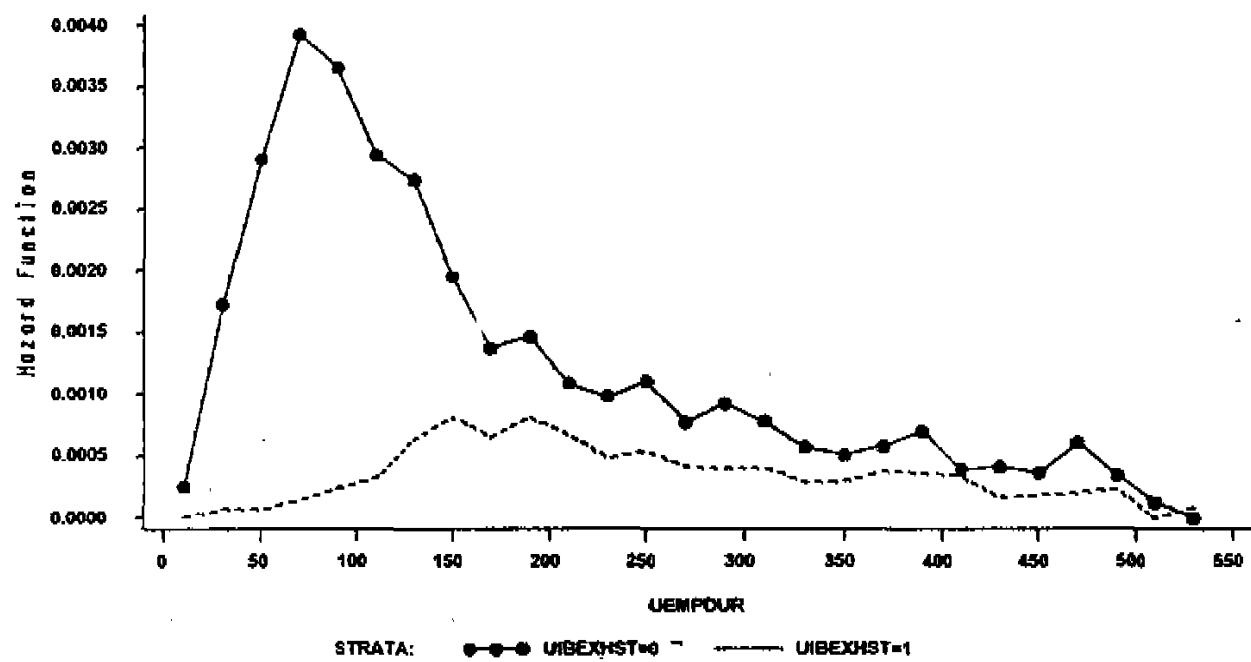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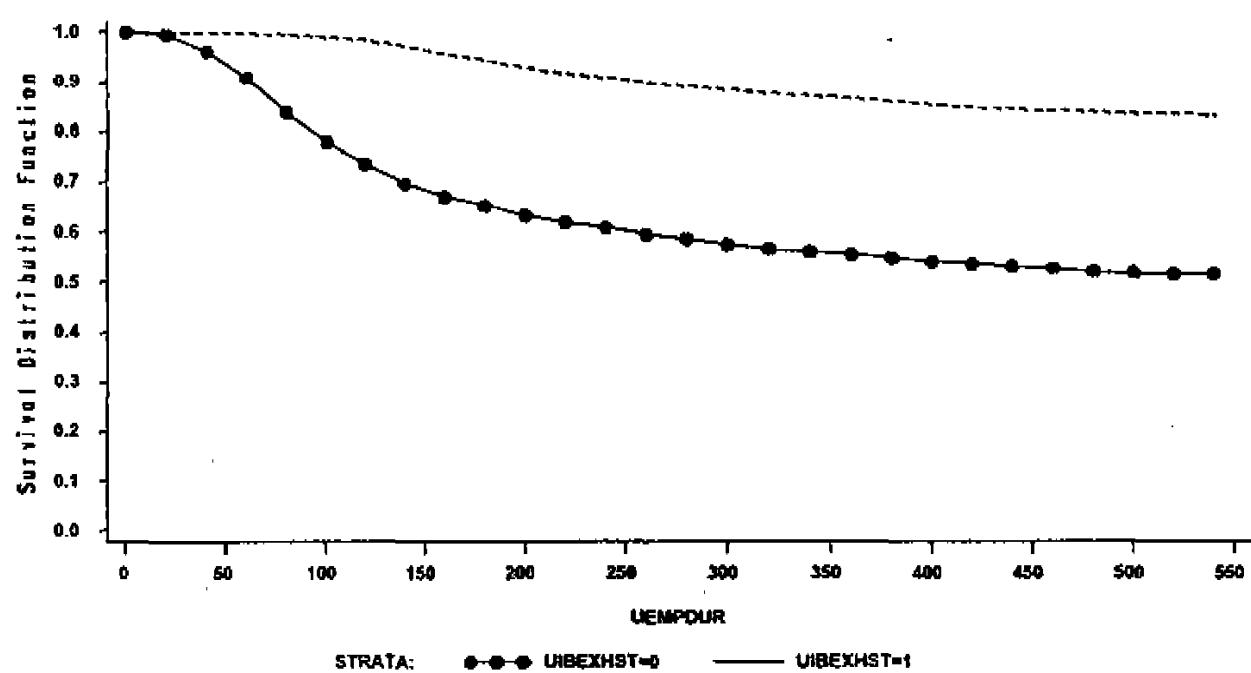
Wilcoxon Chi-square = 102.42, df = 1, p < 0.001



<그림-3>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업종별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
 Indtyp=1: 1차산업, Indtyp=2: 제조업, Indtyp=4: 운수창고
 Indtyp=5: 금융보험, Indtyp=6: 서비스, Indtyp=7: 건설전기
 Wilcoxon Chi-square = 788.08, df = 5, p < 0.001



<그림-4>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소정급여일수별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
 D5=30: 30일, D5=60: 60일, D5=90: 90일, D5=120: 120일
 Wilcoxon Chi-square = 494.60, df = 3, p < 0.001



<그림-5>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소진여부별 누적 생존율 추이와 재취업 위험도
 Uibexhst=0: 급여미소진, Uibexhst=1: 급여소진
 Wilcoxon Chi-square = 5102.55, df = 1,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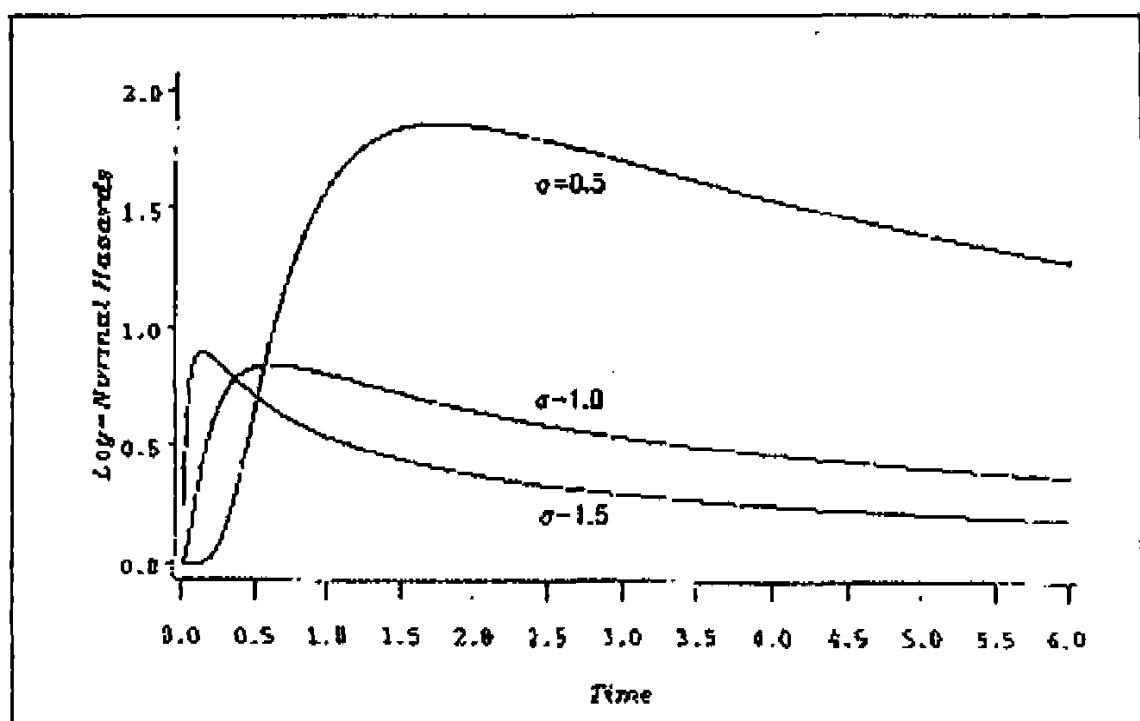
3. 모수적 생존모델의 비교와 선택

본 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 위험도에 이론적인 분포를 추정하는 동시에 수급권자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보다 정확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Accelerated Time Failure 모델의 비교를 통해 자료에 가장 적합하게 결합(fit)된 모델을 선정하였다. 만약 정확한 모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자료가 분석된다면 이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델간의 비교는 Accelerated Time Failure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필수적인 과정이다.

연구방법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모수적 생존분석방법인 Accelerated Time Failure 모델 중 4가지 주요모델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여 각각의 log-likelihood 값을 비교하였다. 아래 <표-5>는 Log-normal 모델, Weibull 모델, Exponential 모델, 그리고 Generalized Gamma 모델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log-likelihoods 값과 각각의 비교모델간의 차이에 2를 곱하여 얻어진 likelihood-ratio Chi-square 값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를 통해 얻어진 likelihood-ratio Chi-square 값은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갖는 nested 된 모델이 자료에 보다 잘 결합(fit)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Allison, 1995: 89).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Log-normal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 위험도의 분포가 정상 분포에 log를 취하여 얻어지는 log-normal 분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log-normal 분포는 아래의 <그림-6>과 같다. 즉 수급권자의 재취업 가능성은 초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일정시점을 지나면서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형태(positively skewed)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위의 총 수급권자에 대한 재취업 위험도 그래프에서 얻어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5> 모델들의 log-likelihoods 값과 likelihood-ratio Chi-square 값의 비교

모델	log-likelihoods	likelihood-ratio Chi-square Statistics	
Log-normal	-29800.78	Log-normal vs. G. Gamma	134.08
Weibull	-30007.21	Weibull vs. G. Gamma	546.94
Exponential	-30358.10	Exponential vs. G. Gamma	1,248.72
G. Gamma	-29733.74	Expoential vs. Weibull	700.64



<그림-6> Log-normal 모델의 전형적인 위험도 분포

4. Log-normal 모델 분석

본 장에서는 Log-normal 모델에 기초하여 분석한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직일로부터 사건(event)으로 생각되는 실업탈퇴일(재취업일)까지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Log-normal 분석은 연구의 자료가운데 이전직종 변수의 사례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표-6>의 이전직종을 제외한 모델과 <표-7>의 동 변수를 포함한 모델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또한 <표-6>와 <표-7>은 자료를 소정급여일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는데, 이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기간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전직종변수를 제외한 모델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아래의 <표-6>과 같다. 먼저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 앞서 σ (scale) 값을 보면, 총수급권자 모델의 경우 1.178을 나타내고, 소정급여일수 60일 이하의 모델에서는 1.175, 90일 모델에서는 1.119, 소정급여일수 120일 모델에서는 1.23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직초기에는 재취업의 가능성성이 급격히 지속적으로 높아지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역 U자(inverted U)와 역 L자(inverted L)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재취업 가능성의 분포는 <그림-6>의 $\sigma=1.0$ 에서 $\sigma=1.5$ 사이의 분포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총 수급권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기대 실업기간(expected unemployment duration)에 대한 영

수급권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기대 실업기간(expected unemployment duration)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육년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그리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인적자본의 수준(교육수준, 근속년수, 임금액)이 높을수록 실업기간이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성별의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여성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남성의 그것보다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소정급여일수로 구분한 모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변수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정급여일수 60일 이하 및 120일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성별과 마찬가지로 외국 선행연구들의 그것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근속년수 및 임금액 변수의 경우 외국의 연구들과는 상반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은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모든 모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소정급여일수가 60일 이하인 30대 미만의 수급권자들에게는 근속년수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큼을 보여준다. 임금일액 변수의 경우, 임금일액이 증가할수록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소정일수 90일과 120일 모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근속년수와 임금액 변수의 영향력이 선행연구들과 반대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된 근로자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행태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후퇴기를 맞아 고임금을 받던 숙련근로자들의 재취업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변수는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에서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대구·경북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⁵⁾, 서울·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 인천·경기, 부산·경남의 순으로 상대적인 실업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정급여일수 60일 이하의 30대 미만 수급권자들에 대한 분석을 보면 지역변수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실업기간에 대한 업종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총수급권자의 경우, 건설·전기업에 종사했던 수급권자에 비해 1차산업과 금융·보험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실업기간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전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운수·창고업,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실업기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업종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소정일수별 분석에서 상당히 달랐으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그 효과가 모든 모델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임으로써 연구기간('96.7 ~ '97.12) 동안 행해진 금융·보험업종

5) 대구·경북지역을 기준 변수로 삼은 이유는 대구·경북지역 실업급여 수급권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다른 지역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변수, 실업사유변수, 그리고 직종변수에 대한 분석의 기준 변수도 같은 이유로 선정하였다.

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해당업종 종사자의 악화된 재취업 여건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직사유변수는 폐업·도산을 이유로 실직했던 수급권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리해고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이유를 가진 수급권자들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폐업이나 도산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실직당한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실직당한 사람들보다 빠른 시일에 재취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소정급여일수별 분석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인사유의 경우 그 효과가 모든 모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 인정주수, 급여소진여부, 그리고 조기재취직수당과 같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은 수급권자의 기대 실업기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급여인정주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주수가 길수록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길어지는데, 인정주수가 1주 증가할 때마다 그 이전에 비해 1.2% 정도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의 효과는 소정일수 60일 이하의 수급권자들 사이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30대 미만 수급권자들은 실업급여의 인정주수와 관계없이 실업을 탈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급여소진여부의 경우 급여가 소진된 사람들에 비해 급여가 소진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대실업기간이 보다 짧고, 조기재취직수당액의 경우 그 금액이 높아질수록 기대 실업기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두 요인들의 효과는 소정일수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표-7>은 위의 분석에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직종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직종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신의 직종을 기입한 22,732명의 수급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에 편파성(bias)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직종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해석은 제외시키기로 한다. 직종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산직, 기술사무직, 단순노무직의 실업급여 수급권자들이 관리전문직 수급권자에 비해 기대 실업기간이 보다 짧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전문직 출신 실직자들이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7년의 IMF 직전 기업의 구조조정이 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직종에 대한 재취업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직종변수의 결과는 소정일수 90일 및 120일 모델에서는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만, 30세 이하의 수급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소정일수 60일 모델에서는 실업기간에 대한 직종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6> 실업기간에 대한 Log-normal 모델 분석 결과: 직종변수제외

변수	전체		소정일수 60일이하		소정일수 90일		소정일수 120일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 (남성)	0.300 ***	0.023	0.428 ***	0.063	0.300 ***	0.036	0.411 ***	0.043
연령	0.013 ***	0.000	0.048 ***	0.011	0.001	0.002	0.046 ***	0.003
교육년수	0.000	0.003	-0.008	0.014	-0.003	0.004	-0.008	0.005
근속년수	0.008 ***	0.001	0.059 ***	0.013	0.010 ***	0.002	0.004 *	0.001
임금일액	0.074 ***	0.007	0.013	0.028	0.068 ***	0.009	0.119 ***	0.012
상시근로자수	0.000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서울, 강원	0.237 ***	0.027	0.148	0.081	0.300 ***	0.036	0.169 ***	0.047
부산, 경남	0.165 ***	0.024	-0.020	0.073	0.170 ***	0.031	0.195 ***	0.046
인천, 경기	0.186 ***	0.024	-0.064	0.074	0.243 ***	0.030	0.134 **	0.046
광주, 전라	0.209 ***	0.030	0.002	0.087	0.223 ***	0.039	0.269 ***	0.059
대전, 충청	0.189 ***	0.030	-0.092	0.083	0.151 ***	0.038	0.355 ***	0.058
(대구, 경북)	--	--	--	--	--	--	--	--
1차산업	0.200 **	0.063	0.045	0.230	0.178 *	0.087	0.087	0.103
제조업	-0.072 *	0.030	0.125 *	0.076	-0.026	0.039	-0.267 ***	0.061
운수, 창고	0.069	0.045	-0.010	0.182	0.200 **	0.069	-0.209 **	0.074
금융보험	0.472 ***	0.052	0.428 *	0.177	0.548 ***	0.072	0.201 *	0.094
서비스	0.011	0.034	0.218 *	0.091	0.078	0.047	-0.274 ***	0.065
(건설, 전기)	--	--	--	--	--	--	--	--
개인사유	0.528 ***	0.052	0.692 ***	0.158	0.451 ***	0.072	0.555 ***	0.088
정리해고	-0.036	0.025	0.208 **	0.079	-0.078 *	0.032	-0.021	0.051
사업주권유	0.074 ***	0.021	0.116	0.068	0.029	0.026	0.131 **	0.045
정년퇴직	0.152 ***	0.033			-0.583 **	0.192	0.042	0.048
기타	0.136 ***	0.027	0.330 ***	0.078	0.084 *	0.035	0.090	0.051
(폐업, 도산)	--	--	--	--	--	--	--	--
급여인정주수	0.012 ***	0.000	0.002	0.010	0.009 ***	0.003	0.013 ***	0.002
급여소진여부	-0.804 ***	0.024	-0.505 ***	0.072	-0.840 ***	0.032	-0.857 ***	0.044
조기재취직수당	-0.026 ***	0.000	-0.054 ***	0.002	-0.026 ***	0.000	-0.024 ***	0.000
상수	5.583 ***	0.023	4.758 ***	0.063	6.093 ***	0.033	3.980 ***	0.043
σ (scale)	1.178	0.008	1.175	0.025	1.119	0.010	1.230	0.015
Log-Likelihood	-29800.781		-3317.052		-15948.590		-10207.456	
사례수	40,175		3,705		20,374		16,096	

* p < 0.05, ** p < 0.01, *** p < 0.001

<표-7> 실업기간에 대한 Log-normal 모델 분석 결과: 직종변수포함

변수	전체		소정일수 60일		소정일수 90일		소정일수 120일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	0.266 ***	0.027	0.527 ***	0.073	0.135 ***	0.040	0.368 ***	0.006
연령	0.011 ***	0.001	0.055 ***	0.012	0.000	0.002	0.057 ***	0.004
교육년수	-0.012 **	0.003	-0.011	0.017	-0.016 **	0.005	-0.021 **	0.006
근속년수	0.012 ***	0.001	0.075 ***	0.015	0.017 ***	0.002	0.008 ***	0.002
임금일액	0.041 ***	0.008	-0.049	0.032	0.027 *	0.012	0.088 ***	0.015
상시근로자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서울, 강원	0.212 ***	0.032	0.158	0.094	0.284 ***	0.044	0.132	0.057
부산, 경남	0.104 ***	0.029	-0.066	0.082	0.114 ***	0.037	0.120	0.056
인천, 경기	0.212 ***	0.028	0.025	0.083	0.259 ***	0.035	0.151 **	0.055
광주, 전라	0.199 ***	0.036	0.049	0.098	0.183 ***	0.046	0.268 ***	0.072
대전, 충청	0.182 ***	0.035	-0.176	0.094	0.137 **	0.045	0.341 ***	0.070
(대구, 경북)	--	--	--	--	--	--	--	--
I차산업	0.126	0.075	-0.049	0.274	0.150	0.105	0.027	0.125
제조업	-0.024	0.037	0.195	0.090	-0.008	0.049	-0.220 **	0.076
운수, 창고	0.080	0.055	0.003	0.214	0.217	0.084	-0.216	0.092
금융보험	0.397 ***	0.065	0.688 ***	0.194	0.550 ***	0.089	0.042	0.118
서비스	0.015	0.043	0.147	0.108	0.054	0.058	-0.254 **	0.080
(건설, 전기)	--	--	--	--	--	--	--	--
개인사유	0.700 ***	0.066	0.777 ***	0.187	0.521 ***	0.091	0.871 ***	0.116
정리해고	0.014	0.030	0.313 ***	0.090	-0.038	0.038	-0.025	0.062
사업주권유	0.161 ***	0.026	0.206 **	0.075	0.132 ***	0.032	0.170	0.057
정년퇴직	0.295 ***	0.040			-0.533	0.302	0.168	0.061
기타	0.192 ***	0.033	0.371 ***	0.091	0.154 ***	0.043	0.113	0.065
(폐업, 도산)	--	--	--	--	--	--	--	--
기술사무직	-0.105 **	0.033	0.184	0.157	-0.125 **	0.042	-0.192	0.061
생산직	-0.243 ***	0.034	0.167	0.166	-0.218 ***	0.042	-0.335 ***	0.062
단순노무직	-0.209 ***	0.389	0.204	0.169	-0.197 ***	0.051	-0.288 ***	0.068
(관리전문직)	--	--	--	--	--	--	--	--
급여인정주수	0.033 ***	0.002	0.031 **	0.011	0.036 ***	0.003	0.032 ***	0.003
급여소진여부	-0.696 ***	0.028	-0.475 ***	0.081	-0.693 ***	0.038	-0.747 ***	0.054
조기재취직수당	-0.020 ***	0.000	-0.036 ***	0.002	-0.020 ***	0.000	-0.019 ***	0.000
상수	5.536 ***	0.109	3.918 ***	0.424	5.981 ***	0.166	3.284 ***	0.298
σ (scale)	1.176	0.009	1.099	0.024	1.124	0.011	1.249	0.017
Log-Likelihood	-22436.972		-2425.262		-12052.969		-7723.789	
사례수	22,732		2,115		11,527		9,090	

* p < 0.05, ** p < 0.01, *** p < 0.001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의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40,175명에 대한 실업기간과 재취업 추이를 생존 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최장 실직 기간은 520일이고 최장 실직기간까지 실직상태로 남아있는 수급권자들의 비율(누적 생존율)은 64.83%나 됨을 보여주었다. 한편, 수급권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위험도)은 실직 후 일정 시점까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80일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재취업 가능성은 정상분포에 log를 취하여 얻어지는 Log-normal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Log-normal 모델의 σ 값은 약 1.2로서, 재취업 가능성의 분포가 역 U자와 역 L자의 혼합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Log-normal 모델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교육년수와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길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길어지며, 수급권자의 근속년수와 임금일액의 경우,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임금일액이 많을수록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늘어남을 보여 주었다. 한편 재취업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한 지역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 수급권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은 반면, 서울·강원 지역 수급권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변수의 효과는 건설·전기업에 종사했던 수급권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으며, 금융·보험업에 종사했던 수급권자들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길은 것으로 타나났다. 그리고 수급권자들의 이직사유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는 폐업·도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리해고로 인해 실직한 수급권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다른 이유로 실직한 수급권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은 폐업·도산으로 인해 실직한 수급권자들의 기대 실업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급여 인정주수, 급여소진여부, 그리고 조기재취직수당 등의 실업급여 관련 변수들도 모두 재취업까지의 기대 실업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인정주수는 기대 실업기간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급여소진여부와 조기재취직수당은 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직전의 직업에 대해 응답한 22,732명의 수급권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직종변수는 관리전문직을 가졌던 수급권자들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길고, 기술사무직을 가졌던 수급권자들의 기대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의 선행연구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실직자들이 보다 빨리 재취업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실직당시 급여수준이 높고, 근속년수가 길수록 재취업까지 기대 실업기간이 증가함을 나타냄으로써, 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연구기간인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여 가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근속년 한이 길고 많은 급여를 받는 고연령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학력 관리·사무직 노동자가 집중되어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던 금융·보험업의 재취업 여건의 약화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업기간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은 각 국가가 처한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고학력, 고임금을 받던 화이트 칼라 실직자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또한 지역간 재취업 여건의 차이는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특히 노동시장여건에 따라 상이한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함을 암시해 준다. 지역의 실업율, 도산율, 구인대 구직비율, 지역의 경제성장을 등 각 경제권이 처한 여건에 따라 실업급여의 내용이나 노동시장프로그램(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의 지원범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른 실업대책의 차등화도 고려해볼만 하다. 실업급여의 제도적 요인들은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기대 실업기간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지만, 이것이 순수한 제도적 효과인지 아니면 제도적 요인들이 나타내는 수급권자들의 다른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실업급여의 제도적 변수가 나타내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의 기대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상 이러한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연구의 제한점인 동시에 후속연구들의 과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특히, IMF라는 경제위기속에서 실업급여의 제도적 효과는 정상적인 경제상태와는 완전히 틀려질 수 있으므로, IMF 이후의 상당기간을 연구기간(관찰기간)으로 포함시켜 세밀히 분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의 역동적 추이를 파악하여 실업 관련 현상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마련하고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기존의 사회과학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생존분석(Lift-Table Analysis와 Accelerated Failure Time Model) 방법을 소개하고 이용함으로써, 앞으로의 실업연구에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분석방법들에 대한 이해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 및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과제들은 후속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짐으로써, 실업기간과 재취업 현상에 대한 한국적 이론의 정립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llison, Paul D. 1995.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Cary, NC: SAS Institute.
- Belzil, C. 1995.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over Time : An Analysis with Event History Da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 pp.113-126.
- Blau, David M. 1992. "An Empirical Analysis of Employed and Unemployed Job Search Behavi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5. pp.739-752.
- Carling, K., P. Edin, A. Harkman and B. Holmlund. 1996. "Unemployment Duration, Unemployment Benefits, and Labor Market Programs in Swede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9. pp.313-334.
- Classen, Kathleen P. 1977. "The Effect of Unemployment Insurance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ubsequent Earning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30. pp.438-444.
- Corak, M. 1993. "Is Unemployment Insurance Addictive? Evidence from the Benefit Durations of Repeat Us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7. pp.62-71.
- Ehrenberg, Ronald G. and Ronald L. Oaxaca. 1976. "Unemployment Insurance,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Subsequent Wage Gai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6. pp.753-766.
- Holen, A. 1977.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Entitlement on Duration and Job Search Outcom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30. pp.445-450.
- Idson, Todd L. and Robert G. Valletta. 1996. "Seniority, Sectorial Decline, and Employee Retention : An Analysis of Layoff Unemployment Spel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4. pp.654-676.
- Jones, Stephen R. G.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Spells and Reservation Wages As a Test of Search Theo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 pp.741-765.
- Kats, Lawrence F. and Bruce D. Meyer. 1990. "The Impact of The Potential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o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1. pp.45-72.
- Korpi, T. 1995. "Effects of Manpower Policies on Duration Dependence in Re-employment Rates : The Example of Sweden." *Economica*. 62. pp.353-371.

- Levine, Phillip B. 1993. "Spillover Effects Between the Insured and Uninsured Unemployed."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7. pp.73-86.
- McCall, Brian P. 1997. "The Determinants of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pp.715-734.
- Meyer, Bruce D. 1990. "Un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Spells." *Econometrica*. 58. pp.757-782.
- Poterba, James M. and Lawrence H. Summers. 1995. "Unemployment Benefits and Labor Market Transition : A Multinomial Logit Model with Errors in Classific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7. pp.207-216.

Abstract

A Study of Unemployment Duration: A Survival Analysis Using Log Normal Model

Kang, Chul Hee · Kim, Kyo Seong · Kim, Jin Wook

In Korea, little is known about unemployment duration and exit rate from unemploymen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using data for the years 1996 and 1997 on unemployed individuals who are 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in Korea. A parametric survival model (log-normal model) is adopted to identify factors predicting transitions to reemployment. Factors that affect unemployment duration are sex, age, employment duration (year), prior salary, region, prior employment industry, cause of unemployment, officially determined unemployment benefit duration, degree of benefit exhaustion, and amount of benefits for early reemployment. However, educa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gree of benefit exhaustion, the exit rate from unemployment decreases as benefit exhaustion is approached. In amount of benefits for early reemployment, the exit rate from unemployment increases as amount of benefits increases. Hazards for reemployment gradually increase until 80 days after unemployment and gradually decrease in the following period. Thus, we find that distribution of hazards for reemployment has log-normal shapes between inverted U and inverted L. This paper takes advantage of a unique analysis about unemployment duration and exit rate from unemployment in the Korea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the most valuable social safety-net mechanism in the recent national economic crisis. Indeed, this paper provides a basic knowledge about realities of unemployed individual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identifies research areas that require further study.

Tel: 02-3277-3449 Fax: 02-3277-2097 Email: chulhee@mnewha.ac.kr	Tel: 02-3408-3145 Fax: 02-3408-3308 Email: kskim@sejong.ac.kr	Tel: 02-361-3536 Fax: Email: beyond@hanmail.net
---	---	---